

“교역규모 27억弗… FTA 조기 타결로 경험 확대해야”

文-이스라엘 대통령 정상회담

수소경제·AI 등 폭넓은 의견교환
고등교육 협력 등 2건 MOU 체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작년 양국간 교역액 27억불 기록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수소경제·인공지능(AI)·5G(5세대 이동통신) 등 협력 강화 ▲한-이스라엘 양자관계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조속한 타결 공감대 ▲지역정세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집현실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때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문재인 대통령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양해각서 서명식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은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면서 1962년 수교 이래 반세기 넘게 우호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켰

다”며 “양국은 작년 교역 규모가 27억불로 역대 최고(교역액)를 기록, 2001년부터 양국 정부가 공동출자한 한-이스라

엘 산업연구개발기금사업을 통해 무인항공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공동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또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공통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양국관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특히 양국간 FTA가 조기에 타결된다면 양국간 교역, 투자, 서비스 등 경제협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상생협력 기반 공고화를 위한 총 2건의 정부간 MOU(고등교육협력·수소경제협력)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한-이스라엘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식 오찬 때 “리블린 대통령과 진솔하고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열어갈 양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스라엘이 가진 첨단산업 분야의 뛰어난 기술력과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 및 제조업 융합이 결합되면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한-이스라엘 정상회담 관련 “우리나라의 대중동요외연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실질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중동 내 우리기업 진출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결위, 추경심사 시작부터 與野 파열음

여야 이견으로 30분만에 정회
19일 전체회의서 추경안 의결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나선 여야는 15일 2차 종합정책질의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보수권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외교부)·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 일부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고, 여야 이견으로 회의는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번 추경과 더불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마련한 최대 3000억원의 추경 증액 등을 두고 정부 질의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 측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영(행정안전부)·김현미(국토교통부)·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등 일부 위정자만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이현재·장제원 등은 이번 질의와 관련 “국정을 총괄하는 이 총리 등의 해외 순방을 나갔다”며 “종합적·책임적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차선으로 청와대 김 실장이나와 (이 총리 대신)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총괄은 홍 부총리가 하는데 누구한테 더 물어본다는 것이냐”며 “김 실장은 이 일에 대해 직접적 소관 업무·의무가 없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12일 전체회의(1차 중

합정책질의)에서 일본 경제 생트집에 대해 (정부를) 충분히 야단쳤다”며 “속 기록을 보라”고 하소연했다.

홍철호 한국당 의원은 “정책실장을 참석시키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이지 여당을 압박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오전엔 여당부터라도 질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속개를 촉구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와 청와대 기조가 같은지 묻는 것이 중요하다”며 “질의를 하면서 교섭단체 3당 간사는 김 실장 출석에 대해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정부 태도를 지적했지만, 본격적 질의에 나서면서 여야 기싸움은 일단락했다.

여야는 이날 질의 이후 17~18일 예산심사소위원회 정밀 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가결할 경우 추경은 이날 곧바로 본회의에 올라간다.

하지만 추경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 등 여권은 이번 추경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예산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재해 지원 추경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참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정의당 등 범진보진영도 ‘내년 총선용 선심쓰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심사를 예고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 내 처리가 힘들거나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석대성 기자 bigstar@

“韓日 과거사 송곳같아… 지혜모아 해결을”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제 “日, 양국관계 발전 역행처사 지적”

문재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시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과거사 문제는 한 일관계에서 주머니 속 송곳과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사 문제는)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 역시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해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인 점을 지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와 일본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다”며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은 서로 도우며 함께 경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발전시켜 왔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질서 속에서 부품·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함께 성장해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양국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것임을 재차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일본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기업들은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를 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이는 일본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며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수보회의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우승준 기자

황교안 “경제문제 논의회담 응할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경제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회담이라면 어떤 형식이라도 응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회담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그간 문 대통령과의 일대일 영수회담을 요구해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청와대 회담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위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면 한국당은 대응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일본 관련 기자회견 도중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회담 형식에 대해선 “경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국가·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떤 형식에도 다 동의한다”고 밝혔다.

靑에 日 규제대응 관련회담 제안 “국민 지키기 위해 어떤 형식도 동의”

황 대표는 이날 회담 제안에 이어 ▲대일·대미특사과견 ▲관공정 협력위원회와 일본규제 관련 대책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외교라인 전면 교체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황 대표 제안에 여야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청와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경제보복 등에 대한 초당적 대화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